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Reconceptualizing Home Economics by Focusing the Concept of
‘Family life welfar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노영주
박사과정 허정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서지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선희

Dept.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 Youngju Noh

Doctoral Course : Jungwon huh

Dept. Consumer Studies and Resoure management, Seoul National

Doctoral Course : Jiwon Seo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Professor : Sunhee Seo

〈목 차〉

I. 서 론

III. 가정복지의 개념화

II. 가족의 변화와 복지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nceptualize home economics by focusing the concept of ‘Family life welfare’ which pursue the improvement of family life through making the home resourceful and developing the community.

The reconceptualization of home economics as family life welfare could solve the problems, identific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which home economics lack of. It, also, would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an arena and activation of the Discussion on the family life by criticizing several approaches based on functionalism. Finally,

the utilization of home economics majors in public affair means the advancement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 서 론

지난 이십여 년 간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반성 및 새로운 대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 가정관리학의 분과 혹은 통합이라는 쟁점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가정관리학의 분과 및 통합 논의는 기존의 분과학문 영역을 재편하고 영역별 전문화를 위하여 가정관리학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가정관리학 혹은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쟁점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관리학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런 상태에서 IMF 구제금융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가속화된 대학구조 조정과 대학 개혁의 압력은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구조조정과 개혁의 흐름은 '수요자 중심 대학'을 기치로 하여 모든 학과를 완전경쟁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역별 전문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보다는 가정학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관리학의 통합 논의 재개와 가정학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가정관리학의 통합 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와 함께 가정학 통합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통합 논의는 영역별 분리(가정학 하위 분과학문간의) 혹은 분과(가정관리학 내의)보다는 통합이 가정학 혹은 가정관리학의 정체

성 확립에 도움이 되며 바로 그것이 가정학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개별 영역을 묶되 그들을 올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선에 그침으로써, 가정학 혹은 가정관리학의 통합성과 개별 영역 간의 연계성 확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정체성의 문제에는 통합이 도움이 되지만, 통합은 애초에 분리 혹은 분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원인인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선희 외, 1995).

이 연구는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체성과 통합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정학의 전문적 활동 영역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학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가정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이러한 인식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통합적 성격이 강했던 초기의 가정학(혹은 가정교육학)은 '가정과 교육'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의 과학화를 계몽함으로써 학문의 교육활동 영역과 사회적 활동 영역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가정학이 학문적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정학은 개별 분과학문으로 분화되고 전공 영역이 세분되었으며, 이것은 학문영역의 전문화를 통한 전문인 양성이라는 학계의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은 학교 현장에 있는 일선 교사들에게 위임되었으며 가정학의 핵심적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갔다. 또한 가정학 내 전공 영역의 세분화는 통합된 가정학으로서의 사회적 활동 영역을 약화시켰다. 가정학의 교육 활동 영역과 사회적 활동 영역 축

1) 대부분의 논의에서 가정학의 하위분과 학문인 식품영양학과 의류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나, 가정관리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라는 쟁점은 가정학 자체보다는 가정관리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자들의 전공을 고려하여 가정관리학 차원의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하되 가정학 차원의 통합적 논의도 병행하면서 가정학의 재개념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소라는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개별 분과학문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식품영양학과 의류학은 가사노동의 상품화 및 자본주의 시장 확대에 따라 전문적 활동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가정관리학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가정 관리학과의 전담 영역이었던 '가정과 교육'도 중심적으로 키워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가정학을 '생활'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은 역설적으로 학문의 토대인 전문적 활동 영역의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정 학문을 개념화할 때는 전문적인 활동을 통한 학문의 기능과 학문분야로서의 특성을 통한 학문의 구조라는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가정학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학문분야로서의 가정학 혹은 가정관리학의 특성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의 학문적 기능이라는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도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학의 전문적 활동 영역 발굴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구성'을 재개념화의 목표로 한다. 이것은 거의 분리 상태에 있는 가정학 하위 분과 영역의 통합에 기여할 것이며,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가정학의 전문 지식이 직접 적용 가능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이는 나아가 가정학 전공자의 취업을 제고와 학문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의 이론들이나 조사결과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재개념화 작업의 필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가정의 자원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통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가정학의 재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가정 혹은 가정생활'이 가정학의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은 가정학의 성립 당시부터 학문적 이념으로 표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는 오늘날 가정생활은 노동, 여가와 함께 사회성원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다양화되며 급증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가족관련 정책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II. 가족의 변화와 복지

복지 정책 혹은 복지 담론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 그리고 가족의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가족원들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주로 가정 내에서 생산하였으며, 이들에게는 가족의 복지보다는 생계유지가 최우선의 과제였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만이 유일한 생존 및 적응기제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가족 및 친족관계, 거주지에 기반한 마을공동체는 가족원들이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주로 양질의 노동력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노동력 충원은 국가나 기업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지체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팽창으로 이러한 지지체계도 약화되었으며 가족의 생존과 복지는 개별 가족의 역량을 벗어나는 문제가 되었고, 가정생활과 가족부양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이를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의 노동력이 특정 기업에 미리 귀속되지도 않고 채용 후에도 단기적 사용으로 한정될 수 있을 때, 기업은 불특정 개인의 가정생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동기화되며 가족이나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 전략을 택하게 되고,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문제가 가족문제로 연결되며 가족문제 역시 사회문제화 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노동력 배양 및 공급기능을 가정에 크게 의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미루어 왔다. 1960,

1970년대에는 '선성장 후분배'의 이론하에, 1980년대에는 경제위기론과 경제자유주의학의 주장 아래,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의 국제적 무한경쟁의 논리 하에서 가족부양과 가정생활을 위한 사회정책은 거의 유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신용하·장경섭, 1996).

한편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가족부양과 가정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발전에 대한 성찰과 거시적 평가가 결여된 채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만을 중심으로 추진된 근대화 과정과 관련되며 구체적으로는 내수지향적 소비자본주의의 도래에 따른 것이었다. 사기업들은 다양한 기제를 통해 가정생활을 잠식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유지가 상당 부분 구매력과 상품 소비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생활의 주요 운용자인 여성의 의식과 역할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시장대체가 가능한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장의존적 경향은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현대 사회에서 급변하는 개별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존적 경향은 국가가 가정의 복지를 책임져야한다는 이념보다는 가정이 가정생활의 복지를 책임져야한다는 관념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이지만 그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것은 결국 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자본은 추가적 상품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별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가족의 소비과정 자체를 개별화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상품 소비를 통한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가족유대 역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장경섭, 1994). 따라서 시장의존적 복지를 전제로 할 때, 가족의 복지 수준은 개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

회적 요구에 의해 좌취되어 온 가정이 국가적 보호를 받기는커녕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자율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88올림픽을 치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경제성장 일변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개인주의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치와 요구가 다원화되고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다양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정자급적 복지를 전제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은 점점 더 현실성을 잃어가게 되었고, 따라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활발히 언급된 것이 북구 유럽의 국가주도 복지유형과 가족복지의 개념이다²⁾. 여기에서는 가정의 복지는 더 이상 개별 가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국가주도형 복지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가족문제에 개입하느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북구 유럽사회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공적인 보장급부를 통하여 국가가 가족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사회는 산업화가 초래한 가족변화, 즉 이혼율, 독신율, '미혼모'의 증가와 같은 변화를 산업사회에서의 '다양한' 삶의 형태로 수용하며 복지 이념형의 가족(the family)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복지혜택도 상당하여 사회의 중간계층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며, 국가는 가족의 복지 능력이 약화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가족의 비용을 사회화한다(조홍식 외, 1997). 이처럼 국가주도형 가족복지에서는 초기의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빈자 중심의 경제적 보장의 가족 복지 개념에서 나아가 삶의 질과 생활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한 비경제적 욕구들도 가족복지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기

2) 이후의 논의는 대부분 북구 유럽사회의 복지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근거한 자생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존의 국가주도형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 속에서, 국가복지를 대체할 사회복지 혹은 복지사회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복지사회형 복지 정책은 국가가 주로 국빈층을 대상으로 주로 공적부조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개별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주도형 복지 정책에 대한 결점을 지적하며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 상업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가정을 단일한 행정적 잣대로 가정생활을 재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실용적 측면에서 거대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서비스가 과연 효율적인가, 가정생활이 상업화의 대상이 되어 생산과 분리된 소비의 집단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등에 대한 의문에서 복지사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가정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주체를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과거 혈연중심의 친족공동체와는 구분되는 근대적 공동체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 논의에서는 국가는 개별 가정이 지역공동체 속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가정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개별 가정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가정의 공동협력자적 역할을 재정립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요보호자 중심 복지 정책은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최저생활수준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가족부양과 가정생활 복지의 상당 부분이 개별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이념 역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은 개별 가정의 노동력 재생산 기능을 지지하여 가정의 자생적 능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가정을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가정 내에 속한 개인 역시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에 대한

근대적 이분법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 가정 내에 민주적이고 평등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삶의 원리를 공동체적 유대관계에 적용시키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기보다는 가정을 공적 영역과는 분리되는 삶의 안식처이자 애정적 지지집단으로 이념화하면서 교육을 상품화하고 개인을 파편화시키는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은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자체적인 평가와 성찰없이 앞만 보며 달려 온 급속한 근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하고 성찰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가족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화의 작업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 바로 가족의 복지를 논의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한국적 특수성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가정복지의 개념화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³⁾.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복지 현실은, 개별 가족의 치열한 노력, 가정을 사적 자치와 자급의 단위로 보는 전통적 관념, 부분적인 시장의존형 복지, 그리고 최소한의 국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복구 유럽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 혹은 복지사회 논의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접목시켜 보려는 입장을 취했다. 현대 가족의 변화와 복지를 ‘가정복지’, 즉 가정의 자원화와 지역공동체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한국적 현실이 이웃의 가족부양과 가정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집단적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3) 장경섭(1994)은 한국의 가족을 유교적 가족규범, 도구적 가족주의, 서정적 가족주의, 소비지향적 가족관계 등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교적 가족규범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도덕적 통합성 유지에 기여하였으나 가족제도의 변화지향적 기능을 제한시켰으며, 국가의 정치경제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 도구적 가족주의는 가족을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지로 전락시켰고, 서정적 가족주의는 가족을 감정적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갈등의 가능성성을 강화시키기도 하며, 소비지향적 가족관계는 가족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가족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제반의 민주적 질서확립을 위한 가족의 변화지향성, 국민생활의 범사회적 보호, 민주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III. 가정복지(family-life welfare)의 개념화

1. 가정생활의 정의

가정생활이란 가정구성원들이 '집'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들의 총체이다. 가정생활이라고 하면 우선 가사(家事)를 떠올리기 쉽다. 가정생활에 가사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사가 곧 가정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가사는 의식주를 처리하는 방법 혹은 기술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은 그보다는 훨씬 포괄적 개념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안팎의 생활문화 전체를 포함한다. 가정생활은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성인 그리고 여성, 남성들과 같이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이 이에 관여하며 가족원끼리 또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가정생활은 의식주의 물질적 토대 위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가정의 보유 자원들이 분배·관리되는 장이다.

가정생활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영위된다. 현대에 들어서 가족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고 외부와 분리된 사생활이 강조되면서 가정을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생활을 외면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가능한 판단일 뿐, 실제로 현대사회의 가정은 결코 사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족원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입이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 임금노동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또한 가정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가정생활은 전체로서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치와 신념체계는 가정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 사회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가정생활은 구성원의 출생과 사망에 걸친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되며 가족성원의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한다. 가족성원들의 욕구는 개인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해지지만 가족의 생애과정(life-course)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종합하자면, 가정생활은 특정한 생존을 위해 필요

한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가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과 일련의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과 욕구충족, 인격형성과 개성의 발달을 도모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생활문화를 형성·공유하며, 가족의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 가정생활이란 개념은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은 총체성을 지니므로 문제가 발생한 표면에 대한 부분적 치료 즉, 문제 있는 개인에 대해서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총체성은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가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2. 가정생활과 가정학

가정생활은 가정학의 학문적 전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연구영역이다. 1972년 12회 국제가정학회에서는 가정학을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정서적, 지성적 인간의 제 요구를 충족하는 많은 학문 위에 구축된 응용과학"(이기열, 1989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장명숙도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고....가정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의 행복증진에 공헌하는 실천과학"(이기열, 1989에서 재인용)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는 가정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가정대학 안에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 즉, 의, 식, 주, 아동 및 가족, 관리 및 소비의 분야가 전문 영역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며, 가정학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여 왔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사회학적 가족연구나, 가족의 복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사회복지학적 가족연구와는 다르게 가정학에서의 가족 연구는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 기반에서부터 가족관계의 상호작용, 자원의 분배와 관리,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어 왔다.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을 취급하여 그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여 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에서의 가정생활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는 가정학 연구의 대부분이 부분적, 파편적이라는 점이다. 가정학은 그 안에서 의생활, 식생활, (또는 주생활), 그리고 가정관리로 나뉘어져 왔고, 이러한 분과의 경향에 따라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도 분과별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가정학에서의 가정생활 연구는 분과에 따른 소재 중심적인 성향을 띠어 왔다. 가정생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결여는 최근 가정관리학 내부에서의 또 다른 영역별 전문화의 추세로 인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가정관리학은 아동, 가족, 소비자, 관리 등으로 영역별 독립을 지향해오는 경향이 증대해 왔고, 이 같은 경향은 부분적 연구를 장려하는 경향을 가속화하였다. 그리하여 가정학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정생활을 연구대상으로 천명하여 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려는 학문적 노력, 나아가 가정생활 자체가 학문활동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가정학 내부에 있는 개별 영역의 연구가 가정생활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연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정학 하위 분과학문간의 연계, 더 나아가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가정학이 노정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생활의 만족, 생활의 질 향상을 가정학의 이념적 목표로 삼아왔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정관리학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의 가치실현과 욕구충족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복잡한 현대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 진단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모색하는 한편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정생활문화를 전승, 재정립하는 학문”(임정빈, 1987)이라는 주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은 가정학의 성립 당시부터 학문적 이념으로 표방되어 왔다. 그런데도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만 하였지 그 연구결과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소홀히 하여 왔다. 그간 가정학에는 가정학의 연구대상과 이념적 목표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또는 행정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복지를 중심으로 가정학을 재개념화 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 활동영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가정복지의 개념화

이 연구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가정복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가정복지는 일정한 단위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통적인 문제와 욕구들을 해결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정의 자원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복지의 개념은 가정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되, 이것을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추진함을 핵심으로 한다.

‘가정의 자원화’⁴⁾는 가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활용하고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자원화라는 개념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현대가족의 문제에 접근하는 ‘가족해체 시각’과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능주의 관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가족 기능의 약화 및 가족해체를 초래하였으며, 현대

4) 조은(1998)은 그 동안 가족기능의 이전이나 사회화에는 국가와 시장이 주로 개입하였으나 21세기에는 그 대신 제3 터의 조직과 역할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국가와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양자택일 식의 논의를 벗어나 제3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제안인데, 그 방향성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정의 자원화’와 일맥상통한다. 조은은 제3의 방법을 전체주의적이지 않으면서 개인주의적이지도 않은 ‘부분 공동체의 활성화’ 또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함께하고 개별화할 부분은 남겨놓는 ‘따로 또 같이’ 공동체의 활성화로 보고 있다. 조은에 따르면, 이것은 공사영역에 대한 근대적 이분법을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와 시장이 식민화한 일상생활을 살려내는 일이기도 하며, 개체화의 문제를 보전하는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가족의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능주의 관점은 가정이 과거에는 제대로 기능하였고 바람직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제하거나, 가정이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했던 과거의 어느 시점을 상정하고 있으며, 가정은 이러저러해야 바람직하다는 잣대를 가지고 현대사회의 가정생활을 재단하는 측면이 있다. 즉 기능주의 관점은 가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미래지향적 잠재성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혹은 가정생활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회문화적·기술경제적 상황에 있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종재해 주는 매개고리의 역할을 해왔다. ‘가정의 역량’(‘가정의 기능’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은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가정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토대로 하여 공유되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의 기능 약화나 해체현상이 아니라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가정의 위상을 제시해주는 청사진과 변화의 방향을 유도하는 담론의 부재이다. 가정이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말만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지역사회의 관계 확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드러내는 새로운 요구를 읽어내고 수렴시켜 나가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의 자원화’라는 개념은 ‘가정의 강화 혹은 약화된 가정 기능의 보완’이라는 관점과는 다른 함의를 갖는다. ‘가정 기능의 보완’이라는 입장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수적 요구 혹

은 그에 대한 동의를 함축한다면, ‘가정의 자원화’ 개념은 사회에 대한 가정의 요구 수렴과 동시에 가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함축한다. 이 연구에서의 가정복지 개념은 가정의 역량을 개발·활용·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복지 책임을 개별 가정에게 전담시키는 것을 넘어서, 가정 자체가 ‘주체’가 되어 국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복지 요구를 관철시키고 한편으로는 복지사회 및 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물론 이런 의미의 가정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자원화는 지역사회의 맥락 안에서 가정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가정의 자원화는 가정생활의 장을 지역공동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정과 사회간의 구조적 연결을 가시화하고 가정생활의 제반 문제들을 쟁점화한다. 이것은 ‘사회 속의 가정, 가정 속의 사회’를 동시에 문제삼고자 함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문래동 D아파트의 부녀회’, ‘신촌 공동육아 어린이집’(1995, 박숙자·한미라)⁵⁾ 등 공동체생활을 지향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가정의 자원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구조적 연결은 강화되고 있으나 여성의 이중역할을 제도화함으로써 일상생활 구조의 분절화는 오히려 강화되고 이로 인해 가정내 소외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생활구조의 통합을 통해 시민자치 혹은 주민자치 활동의 강화,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이 민주성과 평등, 공동체성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5)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은 1991년 30.40대의 평범한 젊은 아버지들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하숙생의 입장과도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아버지부재상태를 극복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모임이다. 이들은 가족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래동 D아파트 부녀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반상회를 확대시켜 주민들의 공동복지를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은 기금을 만들어 아파트 지하에 독서실을 만들기도 하고 환경운동이나 노인들을 위한 야유회를 보조하기도 한다. ‘신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1994년 자녀양육 문제를 안고 있는 맞벌이 가족들이 공동 출자하여 만든 육아 협동조합이다.

가정생활이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복지도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가정복지 서비스는 가정생활 관련 교육·상담·정보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별도의 연구(임정빈 외, 1997)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를 소개한다. 가정생활의 복합성을 고려한 가정복지 서비스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이혼, 재혼, 가정폭력 등), 아동 및 청소년(성교육, 성폭력, 아동학대, 방과후 교육), 노후생활준비(건강, 여가, 죽음준비), 생활개선(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여가 및 시간관리, 기기사용), 재산증식 및 조세(교육비 조달, 저축, 투자, 세금), 건강관리(식이요법, 성인병, 노인병),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재활용, 교환, 처분), 가정생활 관련 법률 상식(가족법, 임대차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자원봉사(아동장애인 노인생활 지원 및 여가활용지도), 생활문화 육성(공동체생활모임, 캠프 등), 자조집단(이혼자모임, 재혼자모임, 치매노인가족모임 등).

다음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가정복지’가 기존에 사용되어 온 가족복지 혹은 가정복지 개념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복지라는 용어는 이 연구 이전에도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가정복지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가족복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복지자를 사용한 연구자들도 명확한 정의없이 이를 사용하였으며, 가족복지라는 용어는 논자에 따라서 다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복지학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가족복지라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⁶⁾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복지의 대상인 가족문제는 가족관계나 가족구성원의 역할로 대변될 수 있는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측면과 상관이 있을 때의 가족문제, 즉 가족의 전체성에 영

향을 주는 문제를 뜻한다(김성천, 1989). 그러나 가족복지라는 현실적으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가족’을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란 누구를 포함하는가 혹은 어떤 가족에게 우선적인 급부가 주어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제기가 파생되며, 가족내 개인복지로 환원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더욱이 사회복지학에서는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가족복지를 개념화하므로 ‘가족의 전체성’을 개념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가족의 전체성을 가족의 원만한 기능이라는 관점 즉,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복지라는 용어 대신 가정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화하였다. 그 이유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가정생활을 그 중심에 두기 위해서이고,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이 자주 개별 가족원 중심의 복지로 환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가정복지라는 개념은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하며, 가정생활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가족성원, 그들 각자의 발달과 그들간의 관계, 가정 안팎에서 일어나는 가족원의 다양한 노동, 이를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 경험의 축적에서 오는 생활문화의 형성 등을 포괄한다. 가정생활을 가정복지의 중심에 놓고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반 가정생활 영역에 관한 것으로 설정하면, 가족에 관한 규범적 관점을 넘어설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역시 포괄하게 된다. 즉, 기존의 가족문제 중심적 가족복지 개념으로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문제 가족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피할 수 없으나,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들을 가정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는 사라진다. 이렇게 볼 때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가족복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복지가 가족생각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에 접근(family-life issues approach)하는데 비해서 가족복지라는 가족문제를 중

6) 사회복지적 대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방법을 뜻하며 여기에는 사회정책적 접근과 사회사업적 접근이 있다.

심으로 개별 가족원에게 접근(family problems approach)한다는 점이다.

한편 사회복지적 가족복지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가족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 보장 이외에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은 의료, 고용, 주거 등으로 확장되어 다분히 '사회보장적'이다. 물론 의료, 고용, 주거 등이 가정의 복지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의 복지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영역 외에 '일상적' 복지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가정이란 복합적 삶의 장소이며, 가정생활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생활체계이며, 인성과 개성의 형성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가족내외적으로 감정적 혹은 물질적 자원들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교환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자는 가족의 주생활 뿐 아니라 의생활과 식생활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개별 가정의 자원의 분배, 관리의 문제와의 연결지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적 가족복지가 가족(family)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가정복지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즉 가정생활(family life)을 대상 영역으로 함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여기에서는 가정학을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이 어떠한 유용성과 효과를 갖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연구의 재개념화가 갖는 유용성 혹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전문적 활동 분야를 확보함으로써 가정학의 정체성과 전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정학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공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다. 둘째, 학문의 전문적 활동분야의 확보는 가정학이 안고 있는 학문적 난제들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학은 학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학문적 단절 상

황에 있어 왔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폐쇄성과 연구방법론상의 제한성으로 그러한 단절 상황을 강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박혜인, 1988).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학이 이루어 온 학문적 성과들이 학문의 전문적 활동 영역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왔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복지 서비스를 통한 전문적 활동 영역은 가정학의 현장으로 기능함으로써 수요자가 곧 공급자인 가정학의 폐쇄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고, 학문의 자기성찰과 비판적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가정복지 서비스를 통한 학문의 전문적 활동분야 확보는 가정생활 혹은 가정에 대한 가정학의 담론화 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가정학은 가정생활 혹은 가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체 내의 담론화 작업에 소홀해 왔으며, 이는 가정학이 학문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과학주의와 기능주의의 세례를 받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 가정복지 서비스를 통해 가정생활의 현장에 보다 깊게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에 관한 가정학적 담론화 작업의 여건을 형성할 것이다. 넷째,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가정학 전공자의 인적 활용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전문적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학은 비록 총체적인 전망 아래에서는 아닐지라도 가정생활의 제반 영역에 관한 많은 정보와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는 가정관리학과, 가정교육과, 가정대학 졸업인력을 교육·훈련하여 가정복지 서비스 업무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력의 확보와 전문자원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전문적 활동 영역의 확보는 가정학을 여성적 학문으로 간주하는, 가정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점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점과 상충하는 듯이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정학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성천(1995). 사회복지학에서의 가족연구. 한국가족학회 편.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방법. 하우박숙자·한미라(1995). 가족과 지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박혜인(1988). 산업사회와 가정생활: 가족연구의 실천적 지평을 위한 일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4호, 204-211.

서선희·고영희·옥경희(1995). 가정관리학의 방향과 교과과정 개발연구: 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4호, 15-24.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이기열(1989).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4호, 198-220.

임정빈(1987). 가정관리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4호, 172-175.

임정빈·김양희·이기영·홍형옥·계선자·이정숙·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3호, 164-180.

장경섭(1994). 한국가족의 이념과 실제.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문화연구소.

조 은(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봄호.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